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 (J-PART)로 재정 건전성 제고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anggc@jejunu.ac.kr

1980년대 이후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를 결합하였으며,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력 감축, 민영화, 재정지출 억제, 책임운영기관, 규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신공공관리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재정운용의 초점이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재정성과 관리제도 등 4대 재정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정성과 관리제도는 재정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3개의 제도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재정성과 목표관리는 1999~2002년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005년에 도입되었다. 또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2006년에 도입되어 성과관리를 위한 수단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출발은 미국의 PART를 들 수 있는데 PART는 2002년부터 미국 대통령실에 소속된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사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인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을 줄인 말이다. PART의 목적은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ART는 사업성과를 측정·진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을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그리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이 제도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사업수행부처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처의

자율평가 결과를 재정당국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정부업무기본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처별로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부처의 평가결과를 점검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2009년도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다. 도 역점시책사업 22개, 행사성 사업 8개, 재정지출 확대사업 6개, 장기지속시책사업 18개, 2008년 신규시책사업 7개, 도 정책반영 주요 국고보조사업 9개 등 6개 분야, 70개 사업을 평가하여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24개 사업(총 189.6억원)에 대해 사업중단, 사업축소, 국고사업 전환, 사업추진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4